

# 건설동향브리핑

## 제403호 (2013. 3. 18)

---

### ■ 경제 동향

- 2월 소비자심리지수 장기 평균 소폭 상회

### ■ 정책 · 경영

- ‘창조 경제’에 대한 건설업체의 전략적 대응 필요
-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 ■ 정보 마당

- 2013년 미국 주택시장 회복세 지속 전망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융합의 혁신이 요구되는 건설산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2월 소비자심리지수 장기 평균 소폭 상회

- 경기 전망 소폭 개선, 가계 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

### ■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개선

-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 :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가 2013년 2월에는 전월과 같은 102p를 기록해, 장기 평균(2003~12년) 수준을 소폭 상회함.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중 가계수입전망(-0.7p)과 소비지출전망(-0.3p)은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현재생활형편(0.2p)과 현재경기판단(0.2p)은 상승함.

<소비자심리지수와 구성 지수의 기여도>

구분	1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소비자심리지수	101	100	101	99	100	100	99	102	102	
(전기 대비 지수차)	-5.0	-1.1	0.4	-1.6	1.0	0.2	-0.9	2.9	-0.6	
구 성 지 수의 기 여도(p)	현재생활형편	-0.5	-0.5	0.5	-0.4	0.2	0.0	-0.5	0.7	0.2
	생활형편전망	-0.4	-0.6	0.2	-0.4	0.4	0.2	-0.4	0.7	0.0
	가계수입전망	-1.0	0.0	-0.3	0.0	0.7	-0.3	-0.3	1.3	-0.7
	소비지출전망	-1.2	0.3	0.3	-0.9	-0.3	0.3	0.0	-0.3	-0.3
	현재경기판단	-0.8	-0.1	-0.3	-0.1	0.1	-0.1	-0.1	0.0	0.2
	향후경기전망	-1.1	-0.2	0.0	0.2	-0.1	0.1	0.4	0.5	0.0

주 :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 지수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하며, 소비자심리지수의 기준치 100은 2003~12년 중 장기 평균임.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 가계 소비 심리는 위축, 경기 전망은 부정적이지만 소폭 개선

-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나,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은 2013년 들어 조금씩 회복세를 보임.
- 현재생활형편CSI(Consumer Survey Index)는 89p로 전월 대비 1p 상승하였으며, 생활형편전망CSI는 96p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임.
- 가계수입전망CSI는 99p로 전월 대비 2p 하락하였으며, 소비지출전망CSI는 106p으로 전월 대비 1p 하락함.

- 현재경기판단CSI는 69p로 전월 대비 2p 상승하였으며, 향후경기전망CSI는 90p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임.

<생활형편 및 가계수입, 소비지출전망CSI>

	1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1월(A)	2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88	86	88	86	87	87	85	88	89	(+1)
생활형편전망CSI	96	93	94	92	94	95	93	96	96	(-)
가계수입전망CSI	98	98	97	97	99	98	97	101	99	(△2)
소비지출전망CSI	109	110	111	108	107	108	108	107	106	(△1)
현재경기판단CSI	73	72	69	68	69	68	67	67	69	(+2)
향후경기전망CSI	81	79	79	81	80	81	85	90	90	(-)

주 : 1) 현재생활형편 및 현재경기판단은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를 조사함.

2)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향후경기전망은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을 조사함.

3) 100보다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음을,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의미를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 부동산에 대한 심리 회복세, 제도적 지원을 통한 부동산 경기 정상화 필요

- 현재 가계의 소비 심리는 위축되어 있으나, 지난해 3/4분기부터 자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주택·상가가치전망CSI는 2012년 8월의 92p에서 2012년 12월에는 97p로 상승함.
  - 주택가격전망CSI는 2013년 1월의 94p에서 2월에는 95p로 소폭 상승함.
  - ※ 자산가치전망CSI는 2012년 12월까지만 공표되었으며, 주택가격전망CSI는 2013년 1월부터 신규 조사되고 있음.
- 고가의 내구재인 주택을 구입하는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개선됨에 따라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한 부동산 경기 정상화가 필요함.
  - 세제 완화와 같은 수요자 지원 등을 통한 수요 확대와 저금리 기업 대출과 같은 공급자 지원을 통한 주택 가격의 안정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 ‘창조 경제’에 대한 건설업체의 전략적 대응 필요

- 창조 경제 정책 기조에 따른 건설산업에의 영향과 건설업체의 대응 방향 모색 -

### ■ ‘창조 경제’와 산업 정책의 변화 방향

- ‘창조 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이후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기업과 산업의 차원에서 창조 경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제 단체와 기업의 논의가 활발함.
-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창조 경제를 산업적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과학 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는 기존 산업 장벽의 파괴임.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이를 위한 선도적인 신산업 육성이 창조 경제의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산업 정책의 핵심적인 성과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있다는 것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내 상생 협력 체계의 구축,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 등이 예상됨.
  - 셋째, 창의성과 혁신에 바탕을 둔 신성장 동력의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을 중점 육성할 예정임. 기존 산업 내 패러다임을 벗어난 창의와 혁신을 통한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 창조 경제의 본격화에 따른 건설산업에의 영향

- 향후 창조 경제는 정부 조직의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경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산업도 내·외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첫째, 내·외부의 필요에 따른 산업의 융·복합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과학 기술 및 IT 기술 등과 건설산업의 융·복합 영역과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산업 내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기존의 상생 협력 관계에 대한 정책·제도적인 이슈에서 더 나아가 대·중소, 원·하도급 업체 간의 실질적 상생 협력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협

력 생태계'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 대한 논의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셋째, 기존의 건설 정책 및 제도의 큰 흐름이 산업 구조와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건설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 새로운 성장 동력원의 창출에 선도적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설업체 특히, 중소 건설업체들을 어떻게 지원, 육성할 것인가에 건설 정책과 제도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됨.

<창조 경제와 건설산업>



■ 창조 경제 정책 기조에 대응한 건설업체의 경영 과제

-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건설업체들의 전략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먼저, 건설업체들은 내부에서부터 창의성과 혁신의 경영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변화하는 건설산업의 경영 환경에 대응하여 창의와 혁신의 문화를 기업 내 정착시키기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경영 정책·전략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전략의 측면에서는 기업 차원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 과거의 제한된 사업 영역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기업의 성장 동력원을 찾는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함.
  - 특히, 중소 건설업체는 정책·제도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 규모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과 신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상생 협력은 하나의 정책·제도적 대응 과제가 아닌 건설기업 경영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도 중요함.

김영덕(연구위원-산업 · ydkim@cerik.re.kr)

##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 건설 근로자의 이동성과 생성·소멸을 반복하는 다수의 소규모 현장 특성 고려 -

### ■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건설업 재해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 증가하는 건설 현장 재해 문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행 접근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실제로 2005년과 2011년 기간 중 건설업 취업자 수 구성비는 감소(7.9%⇒7.2%)하였으나,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 구성비는 모두 증가(18.6%⇒24.4%, 24.4%⇒29.4%)하였음.

### ■ 건설업 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 원인은 ‘현행 방식에 건설 현장의 특성 반영 미흡’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해가 감소하지 않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건설 안전 정책이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다수의 일시적 사업장 및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현장 단위 접근의 한계
  - 건설 재해자 수의 74.1%와 사망자 수의 52.7%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연중 사업장 수는 약 68만 개에 달해 현장 단위의 접근만으로는 역부족
  - 특히,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 요소(안전모·안전화·안전대,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정기 건강 진단)의 공급이 미흡한데, ‘복장, 보호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 중 30인 미만 규모에서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를 차지
- 시공 이전 단계에서의 산업 안전 요소 미반영
  -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중 53.0%가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그 중 비계 등 가설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35.8%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는 미흡한 수준임.
-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 안전 역할 분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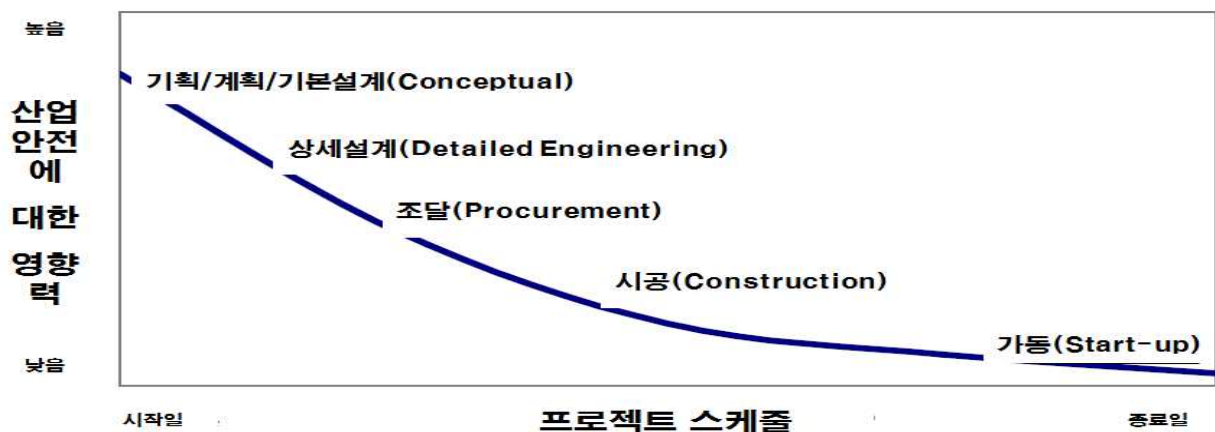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심규범(2013),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 하수급자는 직접 고용자이자 작업 관리자이므로 가장 가까이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산업 안전 관련 책임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업 안전에 소홀

■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 건설 안전 시스템이란 근로자의 이동성과 다수 소규모 현장의 잦은 개폐 등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건설 재해의 예방에 효과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을 의미
- 기초 안전 요소에 대한 건설산업 차원의 공급 체계 구축
  - 모든 건설 현장에 공통적 요소인 기초 안전 요소에 대해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산업 차원의 건설 안전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해 ‘중복과 누락’ 해소
- 계획 및 설계 단계의 산업 안전 요소 반영
  - 시공 이전 단계부터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안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가설 공사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감독 강화

<건설 프로젝트 단계별 산업 안전에 대한 영향력 곡선>



자료 : Szymberski, R(1997), *Construction Project Safety Planning*, TAPPI Journal, 80(11):69-74

-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 안전 역할의 강화
  - 직접 고용 주체인 하수급자에 대한 환산 재해율 관리 및 공표를 통해 하수급자의 산업 안전 역량 강화와 건설 현장의 산업 안전 효과 제고 촉진

심규범(연구위원 · gbskim@cerik.re.kr)

## 2013년 미국 주택시장 회복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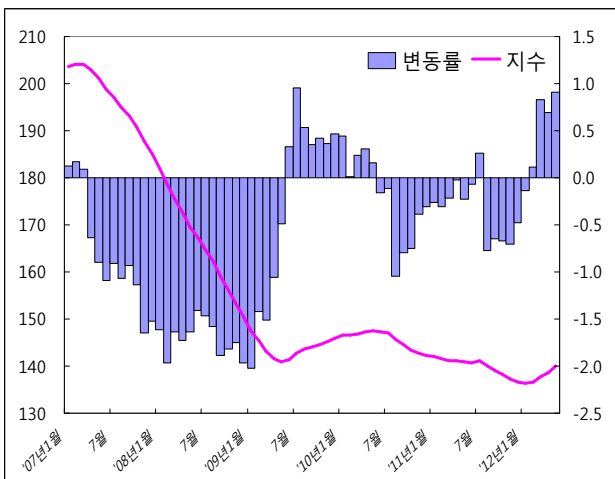
- 2012년 주택 가격 6% 상회 상승, 주택 판매 10% 이상·허가 30% 이상 증가 -

### ■ 2012년 미국 주택 가격 6~7% 상승

- 2012년 12월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하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2012년 한 해 동안 6.9%의 상승세를 시현함.
  - ※ S&P 주택 가격 지수는 고가 주택 대출인 점보론과 서브 프라임 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주택 가격 자료를 사용
  - 이는 2003년 8월 수준이며, 최고점(2006년 4월) 대비 29.2% 하락함.
  - 금융 위기 이후 최저점(2012년 1월) 대비 7.0% 상승하였고, 금융 위기 이후 전고점(2010년 5월) 수준까지 도달함.
-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미국 전역 주택 가격 지수도 2012년 한 해 동안 5.8% 상승하였고, 금융 위기 이후 최저점(2011년 3월) 대비 6.8% 상승
  - ※ 연방주택금융청의 주택 가격 지수는 연방주택국과 정부 지원 기관이 지급 보증하는 담보 대출 자료만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서브 프라임과 고가 주택 대출인 점보론 자료는 제외됨.
  - 2011년 3월에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 201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함.
  - 2012년 12월은 전월 대비 0.6% 상승한 수준이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함.

<S&P 주요 20개 도시 지수 및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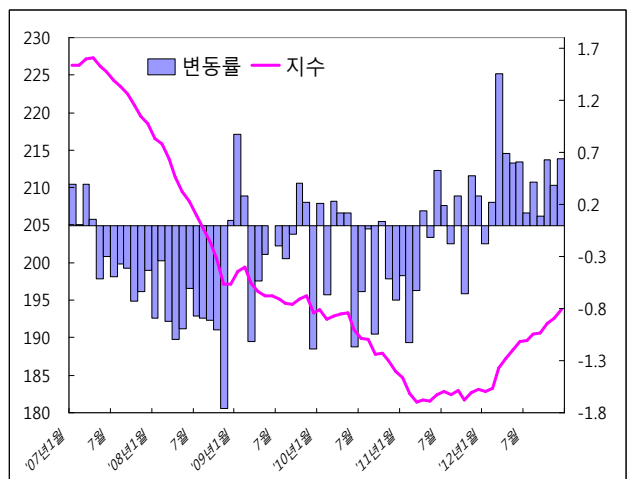
(단위 : %)



주 : 계절 조정 후, 전월 대비 변동률  
 자료 : S&P/Case-Shiller Home Price indices, Composite-20 지수

<FHFA 미국 전역 주택 가격 지수>

(단위 : %)



주 : 계절 조정 후, 전월 대비 변동률  
 자료 :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US 주택가격지수



## ■ 2012년 재고 주택 판매 9.4%, 신규 주택 판매 19.9% 증가

- 2012년 재고 주택 판매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466만 호 수준으로 집계됨.
  - ※ 계절 조정 후 예상 연간 물량으로 발표되고 있음.
  - 재고 주택 판매량(전미중개인협회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은 2009년에 434만 호, 2010년에 419만 호, 2011년에 426만 호 수준으로 감소함.
  - 2012년 1월부터 재고 주택의 판매량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4/4분기에 들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견인함.
  - 특히, 중서부 지역(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간, 오하이오 등)의 증가세가 현저
- 2012년 신규 주택 판매량도 전년 대비 19.9% 증가한 36.7만 호를 기록함.
  -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신규 주택 판매는 2/4~3/4분기에 가장 활발했고, 4/4분기 들어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함.
  - 지역적으로는 재고 주택의 판매가 활발했던 중서부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가장 낮았으며, 미국 전역으로 보면 신규 주택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임.
- 2012년 공급 지표도 시장 회복을 반영하여 일제히 증가세를 보임. 전년 대비 허가 30.7%, 착공 28.1%, 준공 11.1% 증가

## ■ 2013년에도 주택시장 회복세 지속 예상

- 5년 이상 장기간 공급 감소에 따른 시장 정상화,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 압류 주택 소유주의 여건 개선 등이 맞물려 2013년에도 미국 주택시장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 2007년 이후 허가·착공·준공 모두가 최근 40년 대비 60% 이상 감소하며, 공급 물량의 조정도 비교적 탄력적으로 이루어짐.
  - 가격 선행 지표인 2013년 1월 PHSI(Pending Home Sales Index)도 전년 동월비로는 4.5% 상승하였고, 최근 21개월 간 가장 높은 수준임.
  - ※ PHSI(Pending Home Sales Index)는 주택 거래가 완료되었으나,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를 지수화한 것으로 2~3개월 후의 주택 가격에 대한 선행 지수로 사용됨.
  -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류 주택 소유주들의 신용이 회복되면서 일부 중저가 매물 집중 현상이 목격되고 있음.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 12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영향 평가 자문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참여</li> <li>- 국토 교통 관련 규제 개선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협의</li> </ul>
3. 13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주최, ‘국내외 건설 경기 전망 및 건설 정책 동향 정기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주제 발표 참여</li> <li>- 주제 : 국내외 건설 경기 전망 및 건설 정책 동향</li> </ul>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건설의 날 훈·포장 후보자 평가위원회 1차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참석</li> <li>- 훈·포장 후보자 평가</li> </ul>
3. 15	대한상공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 세미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주제 발표 참여</li> <li>- 주제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새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li> </ul>

■ 최근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공공 시설 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개발에 따른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 채납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기부 채납의 기준 및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허가 관청의 과도한 요구 발생</li> <li>• 기부 채납은 민간인 또는 단체가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공공 기관에 이전할 것을 표시하고 국가나 공공 기관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 계약을 의미</li> <li>- 무상 귀속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새로이 공공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 시설을 설치한 때에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을 말함.</li> <li>• 서울시 대규모 건축물의 총사업비 대비 기부 채납의 비율은 8.4%, 평균 금액은 244.3억원으로 조사됨.</li> <li>-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07년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부채납 비율 6.1%보다 높음.</li> <li>- 시설별로는 유통 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부 채납의 비율이 가장 높아 총사업비 규모는 9,700억원, 기부 채납 비용은 2,040억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21%를 차지함으로써 주상복합 1.8%, 교육 연구 4.3%보다 높음.</li> <li>• 현행 공공 시설 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li> <li>- 기부 채납 의무만을 규정하고 사업자의 부담 정도를 제한하지 않아 평균 사업비의 8.4%를 기부 채납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 관련 부담금과 세금 부과로 사업자는 삼중 부담</li> <li>- 인센티브 관련 규정의 미비 및 실효성 부족</li> <li>- 「주택법」에 따른 주택 개발 사업 승인시 조건으로 부과된 간선 시설의 설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기부 채납 비용의 원가 반영이 불분명함.</li> </ul>

## 융합의 혁신이 요구되는 건설산업

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거시 지표는 인구 성장률, 도시화율, 그리고 경제성장률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도시화율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제성장률 역시 활발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현재의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는 이러한 지표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물론, 새로운 건설 수요도 있다. 시대적 관심이 무엇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존의 것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 짓는 것만이 최상의 가치가 되는 시대를 살아온 탓인지 새롭게 부각되는 유무형의 시장에는 아직 미온적이다.

이러한 불황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건설산업은 글로벌, 친환경, 그리고 사용 측면에서 외형적 성장의 발판을, 융합과 혁신에서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넓나들’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융합은 혁신과 신시장 창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단순 하드웨어의 융합만이 아닌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람의 융합이 필요하다. 현재의 기술에 새로운 시각, 역량, 기술이 더해져야 한다. 특히, 융합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의 실질적인 융합이 가장 필요하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건설산업과 기업은 대표적으로 학제 간의 경계가 심한 분야이다. 예를 들면 건축, 토목, 플랜트 부문 간 파이프 라인의 인력 공급과 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관련 부문의 순혈주의는 여전히 있다. 전공만이 아닌 경험과 전문성 기반의 인력 양성 및 관리 중심으로 건설 기업의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새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훗날을 대비해 노력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성장 시대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여력이 많지 않았다. 더 큰 성장을 위해 타 산업과의 융합, 프로세스의 통합, 그리고 산업 내의 조각난 전문성을 융합하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지만,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결과물은 생각보다 빨리 얻을 수도 있다.

<서울경제, 2013. 2. 8>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